

오세욱 광주지방법원장 신년 인터뷰

“생계형 범죄 양형·벌금 조정 서민 ‘경제 고통’ 최대한 배려”

“국민을 섬기는 사법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민들의 생활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욱(54) 광주지방법원장은 6일 광주일보와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과 괴리된 사법부는 의미가 없다”며 “최근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광주지법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지법원장은 “생계형 범죄의 경우 벌금을 낮추거나 분납 등의 방법을 통해 다소나마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이라며 “영세업체나 상인들에 대해서도 가능한 양형을 관대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들의 고통이 커진다는 점에서 사법부도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개인파산이나 회생 등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한계상황에 처한 서민들을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원이 지역민들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선 ‘사건을 떨쳐버린다’는 식의 형식적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에게는 이기는 방법을, 피고에게는 자기 주장을 펼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법원이 돼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오 지법원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경제 위기와 관련한 광주지법의 입장.

▲사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기 위해선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다가서야 한다.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에 대한 양형을 줄이거나 벌금을 낮추는 등 어려움에 동참하는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국선변호인 선임이나 소송구조 확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들 제도의 경우 지난해부터 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민원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소송구조의 경우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확대의 필요성이 높다.

-취임후 1년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부분.

▲명실공히 ‘지역민들과 함께 가는 법원’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불황에 처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광주 출신 ▲광주이고 ▲고려대 법대 ▲광주지법 판사(연수원 8기) ▲순천지원장 ▲광주지법 수석부장 판사 ▲전주지법원장 ▲광주지법원장

“개인파산·회생 신속 처리 수요자 중심 사법 서비스”

기울였다. 지난해에는 광주지법에서 판 결정이 1만여 건에 달하고 개인회생·파산신청이 1년씩 밀려 있을 만큼 경제적 어려움이 유난히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파산 전담 판사를 7명을 배치해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전담 판사의 숫자는 서울에 이어 가장 많은 것으로, 경제적 한계상황에 몰린 서민들의 고통을 더는 데 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한

다.
또 올해는 금융권에 진 부채를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와는 달리 최근 금융권이 재산권을 적극 행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취임 이후 광주지법의 변화를 꼽는다면.
▲법정 중심의 재판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법관의 재판 능력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 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법원 접근의 편리성을 돕기 위해 호출벨을 설치하는 등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한 몫을 했다고 자평한다.

민원부서 직원들에 대한 ‘민원응대 모니터링’과 ‘민원서비스 혁신교육’ 등도 적잖은 효과를 거뒀다. 지역민들에게 보다 친근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법원장 취임 이후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정정별 증인신문과 요약조서 시범실시 등을 통해 실질적인 법정중심 재판을 구현했다. 또 주요범죄에 대한 양형기준과 당직법관 영장업무편람을 마련해 신중한 양형 및 인신구속 업무 처리를 도울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직역별 전문가 조정위원 선정과 재판부별 전담 조정위원제 시행 등을 통해 조정의 활성화가 이뤄졌다. 대국민 서비스 강화도 적잖은 성과를 꼽는다. 사법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원·스톱 민원서비스팀’을 운영했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3차 화상통화시스템, 중요관결의 홈페이지 게시 활성화도 이뤄졌다.

-올해 광주지법 운영의 주된 방향은.

▲그동안 강조해온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민사재판의 구술심리주의, 형사재판의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데 관심을 쏟을 계획이다. 또 수요자 중심의 사법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직장내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앞장서겠다.

직원들간 ‘청한 릴레이’나 법원내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법원 가족들의 화합을 도모하겠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사진=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녹색 성장·일자리 창출 ‘두토끼 잡기’

■ 정부 ‘녹색뉴딜’ 사업 추진 배경

경기 살리고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정부가 녹색뉴딜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기로 한 것은 ‘친환경’의 틀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한편 일자리를 대량으로 창출해 보자는 의도로 분석된다.

‘친환경적’인 개발은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방향이라는 인식하에서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양수경쟁인 셈이다.

◇친환경+일자리=녹색 뉴딜(Green New Deal)은 녹색과 뉴딜의 합성어다. 녹색은 저탄소·친환경·자원절약 등으로 대표되는 성장전략을 의미하며, 뉴딜은 일자리창출용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을 부르는 이름이다. 이에 따라 두 개가 합친 녹색 뉴딜은 친환경적인 성장전략을 일자리창출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 보고된 내용은 각 사업간 연계를 확보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실행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연관성있는 업무끼리 ‘정책패키지’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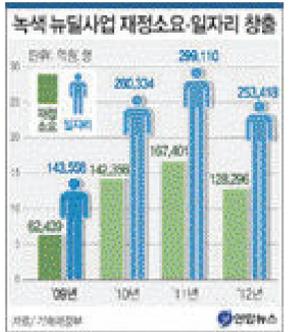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 대응=녹색 뉴딜사업의 목표는 ‘녹색경제 구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이름붙여졌다. 단기적

으로는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두마리 토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녹색 뉴딜 사업은 크게 ▲녹색SOC사업 ▲저탄소·친환경·고효율 산업기술 ▲친환경·녹색생활 등 3가지이다. 녹색SOC사업에는 4대강 살리기, 녹색교통망구축,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이 포함됐으며 저탄소·고효율산업기술을 위해서는 대체수자원개발과 중소기업 건설,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 자원재활용 확대 등이 추진된다. 녹색 뉴딜 사업은 우선 성장 및 일자리 파급효과가 큰 핵심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4대강 살리기와 산란바위오염소 이용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신규 일자리 96만개 창출=정부는 녹색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그린홈·그린빌딩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이 추진되고 에너지소비총량제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준이 강화되며,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녹색뉴딜사업 36개를 위해 정부는 추계로 4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영예 있는 재정(4조3천626억원)까지 합



치면 총 50조원이 투자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창출되는 일자리는 이미 반영된 예산에 따라 생길 것으로 예상됐던 9만3천개에 86만3천개가 더 생겨 모두 95만6천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음달 2단계 추진방안 마련=정부는 이번에 1단계 녹색뉴딜사업을 발표한 데 이어 다음달에는 행정안전부가 주축이 돼 2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단계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녹색 뉴딜사업인 ‘살아있는 강길100 프로젝트’, ‘청계천+20 프로젝트’ 등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가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이 주로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달중에는 신성장동력 산업 등 여러 부문에서도 녹색뉴딜사업 과제를 발굴해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전국 일주 3,114km 자전거 도로 만든다

행주대교~목포~통일전망대...2018년까지 1조2천억 투입

정부의 녹색뉴딜사업에 따라 2018년까지 전국의 해안가와 접경지역을 연결하는 3천여km의 자전거 도로망이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경기 등 전국 12개 시도, 80개 시·군·구와 함께 올해부터 2018년까지 총 1조2천456억원을 들여 총 3천114km의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는 행주대교를 기점으로 인천 강화를 거쳐 서해안 도로를 따라 목포까지 연결된 뒤 다시 부산 해운대와 경북 포항,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남해안과 동해안의 해안 도로를 따라 조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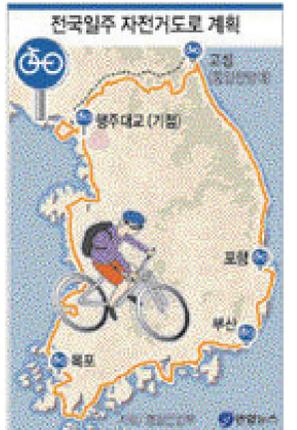
자전거도로는 고성 통일전망대부터는 비무장지대(DMZ) 인근의 접경지역을 따라 행주대교까지 연결돼 누구나 자전거를 이용해 국토를 일주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해안 일주 자전거도로와 접경지역 자전거도로를 단계별로 만들고, 이를 지자체별 자전거도로와 연결해 권역별로 테마노선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지역별로 자전거 주차장 건설과 보도 턱 낮추기 등의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을 발의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국비 70%와 지방비 30%씩, 매년 1천24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되는 구간에서는 시범사업 형식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재정력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2012년까지 4년간 매년 2천



67명씩, 총 8천26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무안 - 장사(장가계) 직항!!!

무안 - 상해(방콕) 직항!!!

* 공항 주차장 무료이용

* 국내 최대의 만족도를 주는 **광주MBC 문화항공** 상합니다 www.kmfc.or.kr

"기초의 때까지 상품과 치안이 다릅니다"

무안 - 장사(장가계) 직항!

- ▶ 광주/목포/대구 → 장사(장가계) 직항
- ▶ 광주/목포/대구 → 상해(방콕) 직항

무안 - 상해(방콕) 직항!!!

- ▶ 광주/목포/대구 → 상해(방콕) 직항
- ▶ 광주/목포/대구 → 방콕 직항

중국東方航空 광주MBC 문화항공 광주/전남 북 유령여행사 ☎ 문의 062-226-6070